지식경제부 예산 평가 및 2013년 투입방향

2012. 6.

지 식 경 제 부

목 차

Ⅰ. 지식경제부 예산 현황 및 평가 ····· 1

○ 예산의 전반적인 현황 및 특징
○ 예산 지출상의 수혜대상 현황 분석
○ 평가 및 시사점

Ⅱ. 2013년 예산투입 여건과 기본방향 ···· 15

○ 대내외 여건
○ 2013년 예산투입 기본방향

Ⅲ. 2013년 핵심과제별 예산투입 방향 ···· 19

1. 대외여건 변화에 적기 대응 ····· 19
2.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 ····· 20
3.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 22
4.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역량 확충 ····· 24
5. 우정서비스의 내실 있는 성장 지원 ····· 27

Ⅰ 지식경제부 예산 현황 및 평가

1 예산의 전반적인 현황 및 특징

가. 기능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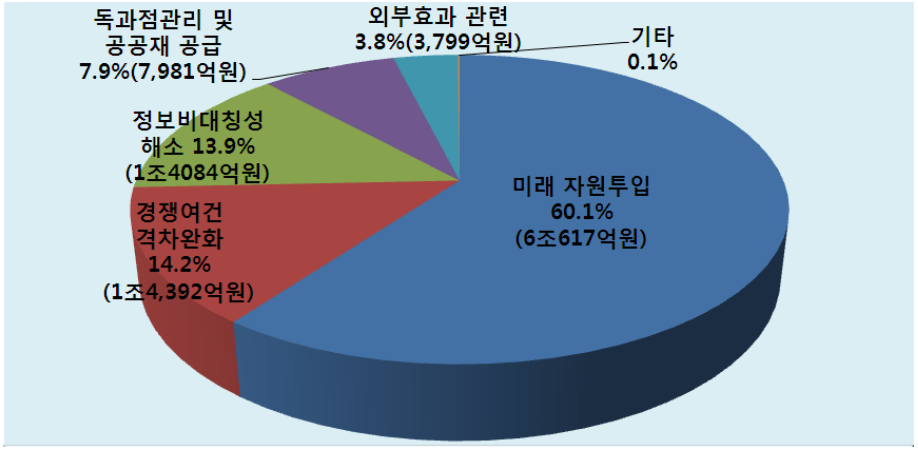
□ 주로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성장동력 확충 등 미래투자 촉진, 정보 비대칭성 등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기능 수행

○ 시장창출, R&D, 인력양성 등 미래성장을 위한 자원투입과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12년 6조617억원, 60.1%)을 차지

○ 기업규모·지역간 경쟁격차 완화(14.2%), 정보 비대칭성 해소(13.9%), 독과점 관리 및 공공재 공급(7.9%), 외부효과 해소(3.8%) 기능도 수행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업전환·구조조정, 고급인력의 탄력적 양성·공급 등 생산요소의 이동을 원활히 하는 예산은 미미한 수준

< 지식경제부 기능별 예산 비중('12년 기준) >



* 분석대상 : '12년 지경부 예산 중 기관운영 경비성 사업과 우정사업본부 예산 제외 (311개 세부사업 약 10조 1,000억원)

《 참고1 》 시장경제체제 아래 지식경제부 기능

◇ 시장경제체제 아래 정부의 기능 분류

시장실패보완	독과점 해소	소수 생산자/소비자의 시장지배로 인한 사회 후생 저해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 공기업을 통한 가격 및 생산
	외부효과 해소	부정적 외부효과 : 비용부과 및 시장거래 제도 등을 통해 과잉생산 해소 (예 : 탄소배출권 거래제) 긍정적 외부효과 : 재산권 확립을 통한 사회 과소생산 해소 (예 : R&D에 대한 특허권 인정 등)
	공공재 공급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 가격기능 작동 곤란, 공유지의 비극 발생 ⇒ 정부의 직접공급 및 허가제 운영
	정보 비대칭성 해소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기회주의적 행태와 거래비용 발생 ⇒ 거래상대방 정보제공, 자격/인허가 제도 등 기회주의적 행태 차단과, 각종 규칙 제정을 통한 거래비용 감축
	생산요소 이동원활화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제한으로 인한 비효율 발생 ⇒ 원활한 산업 구조조정 유도와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시장창출·조정	미래 자원투입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한 개별 기업의 과소투자 문제 발생 ⇒ 위험성이 크더라도 미래 유망한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 ⇒ 신산업 시장창출과 R&D투자를 통한 기업 미래투자 유도 ⇒ 투자비용이 크나 회수기간이 긴 SOC, R&D 인프라 구축
	경쟁여건 격차완화	소득 및 경쟁격차 확대로 인한 장기적 성장잠재력 저해 ⇒ 기업규모/지역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소득재분배 등

◇ 기능별 지경부 예산사업 분석 (2012년 기준)

주요 기능	주요 내용	예산(억원)
미래 자원투입	정부구매 의무화 등 신산업 분야 시장창출, 주요 산업별 원천기술개발, R&D 및 인력기반 구축, 경자구역 조성, 외국인투자유치 등	60,617
경쟁여건 격차 완화	지역산업 육성, 대중소 동반성장, 폐광 등 낙후지역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등	14,392
정보 비대칭성 해소	표준, 인증, 품질·안전규제 무역보험 및 국제거래 신용조사, 해외자원개발 융자	14,084
독과점/공공재	석유비축, 발전소 건설, 전력부하 관리, 도시가스 공급배관, 에너지공기업 출자 등	7,981
외부효과 해소	(부정적) 광해방지비, 기후변화협약 대응 등 (긍정적) 연구개발특구, 산업단지고도화 등	3,799

나. 재원조달 측면의 특징

□ 국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일반회계와 함께, 특정 분야의 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별도로 조성한 6개 특별회계와 4개 기금으로 구성

＊ '12년 세출 : 일반회계 3.1조(19.6%), 6개 특별회계 10.4조(64.8%), 4개 기금 2.5조(15.6%)

○ 특별회계와 기금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에너지공급체계 구축 등의 중장기 투자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점 보유

- 다만,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일반회계의 비중이 낮다 보니, 예산 편성·집행의 융통성이 다소 부족한 측면도 존재*

○ 에특회계, 전력기금 등은 세입이 세출보다 큰 흑자기조로 운용중

< 2012년도 지식경제부 예산의 세입 세출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세입(A)	세출(B)	수지(A-B)
합 계	159,799	160,121 (비중)	△322
일 반 회 계	915	31,368 (19.6%)	△30,453
광 역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122	13,848 (8.6%)	△13,726
에 너 지 및 자 원 사 업 특 별 회 계	46,946	32,672 (20.4%)	14,274
우본 3특별회계(우특, 예특, 보특)	69,227	56,629 (35.4%)	12,598
혁 신 도 시 건 설 특 별 회 계	-	647 (0.4%)	△647
전 력 산 업 기 반 기 금	21,974	15,856 (9.9%)	6,118
정 보 통 신 진 흥 기 금	11,298	6,890 (4.3%)	4,408
방 사 성 폐 기 물 관 리 기 금	9,162	2,164 (1.4%)	6,998
특 정 물 질 사 용 합 리 화 기 금	155	47 (0.-%)	108

《 참고3 》 지식경제부 소관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재원조성 목적

	재원 조성	목 적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酒稅 등	광역경제권 등 지역 발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에너지수급 및 가격 안정 등
우본 3특별회계(우특·예특·보특)	우편·금융사업 수입 등	우편·예금·보험사업 수행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표원, 우본정보센터 지방 이전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사용 부담금	전력 공급·수요관리, 신재생 보급
정보통신진흥기금	주파수할당대가 등	정보통신산업 진흥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지원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특정물질 사용 부담금	오존층 파괴물질의 대체물질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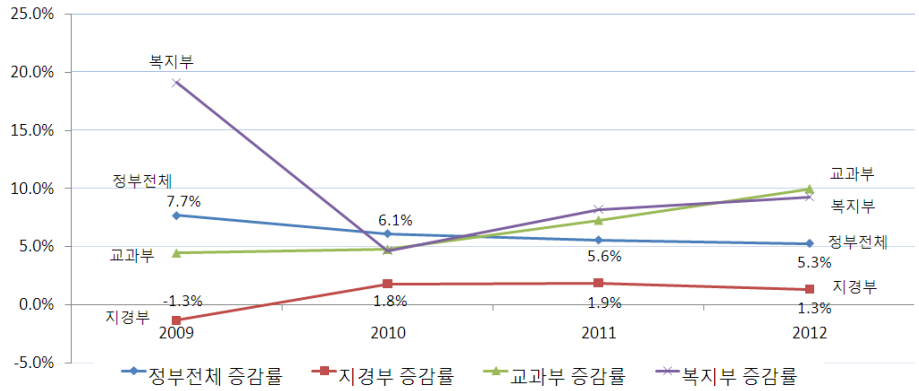
다. 예산규모의 추이

□ 실물경제의 미래를 대비하는데 따른 높은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한 규모의 예산이 반영되지는 못하는 추세

○ 최근 5년간의 년평균 예산증가율(0.9%)이 정부 전체(6.2%) 및 복지부(10.2%), 교과부(6.6%) 등 주요 부처에 비해 크게 낮은 편

- '08년 예산은 15.4조원으로 정부내 비중이 6.03%에 달하였으나, '12년에는 약 16조원으로 정부내 비중이 약 4.92%로 축소

< 주요부처 년도별 예산규모 증감률 비교 >



○ 정부예산 증가분의 대부분은 복지, 교육 등 분야에 배정

< 최근 5년 사이 주요부처 예산규모 변화 현황 (단위: 억원) >

	정부전체	교과부	행안부	국토부	복지부	국방부	지경부	농림부
2008	2,561,721	412,454	389,760	350,478	248,863	195,567	154,380	139,549
(비중)		(16.10%)	(15.21%)	(13.68%)	(9.71%)	(7.63%)	(6.03%)	(5.45%)
2012	3,254,000	532,637	481,848	411,187	366,928	244,109	160,121	154,083
(비중)		(16.37%)	(14.81%)	(12.64%)	(11.28%)	(7.50%)	(4.92%)	(4.74%)
년평균 증감률	6.2%	6.6%	5.4%	4.1%	10.2%	5.7%	0.9%	2.5%

2 예산 지출상의 수혜대상 현황 분석

2011년 지식경제부 총지출 15조 7,831억원

	업종별			기업활동 공통인프라	무역투자
산업 (非에너지) 5조 2,608억 (33.3%)	정보통신산업	주력산업	신산업		
	•소프트웨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동통신 등	•소재, 부품 •자동차, 조선 •항공기 등	•로봇 •바이오의료기기 •나노 등	•입지(산단 등) •인력양성·활용 •출연연 기술표준 등	•무역 촉진 •투자 유치 •산업자원협력
	1조 1,397억 (7.2%)	1조 2,344억 (7.8%)	6,817억 (4.3%)	1조 3,150억 (8.3%)	8,163억 (5.2%)

	에너지 수급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인프라
에너지·자원 5조 703억 (32.1%)	공급	수요관리		
	•국내외 자원개발 •에너지 공급·비축 •원전 건설·운영	•효율향상(ESCO 등) •전력 수요관리 •기후변화협약 대응	•기술 개발 •인프라조성(실증 등) •보급 확대	•안전·품질 관리 •에너지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2조 3,901억 (15.1%)	8,919억 (5.7%)	1조 613억 (6.7%)	7,270억 (4.6%)

우정사업 5조 2,995억 (33.6%)	우편사업	예금사업	보험사업
	•국내외 우편서비스 운영 •우정사업 경영지원	•우체국예금사업 운영 •예금 영업 지원 등	•우체국보험사업 운영 •보험사업 지원(전문성 강화 등)
	3조 1,677억 (20.1%)	1조 8,206억 (11.5%)	2,800억 (1.8%)

기관운영 1,525억(1.0%) 인건비 1,231억 등 (우정사업본부 기관운영 경비는 우정사업 분야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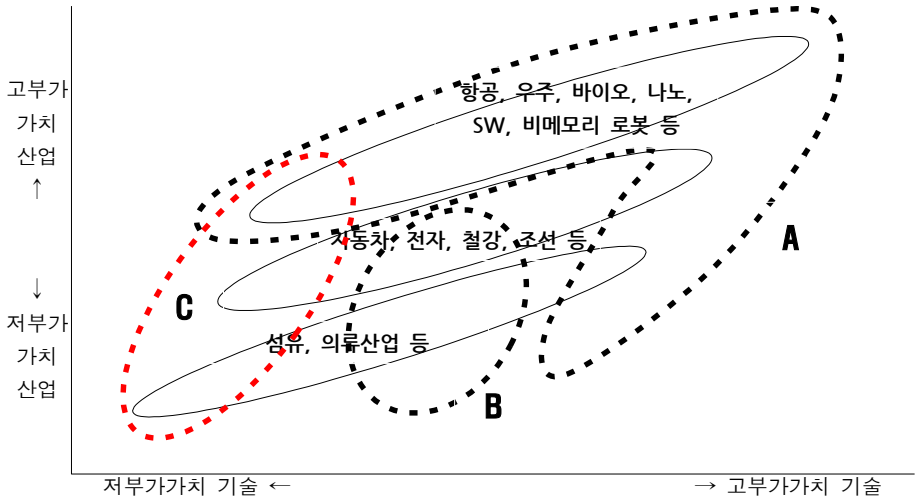
* 괄호안의 비중%는 각 항목이 지경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

가. 분야별

산업 · 업종별(非에너지)

◈ 개별 업종에 직접 투입되는 지경부 예산은 총 3조 558억원 규모로, 대부분이 신산업 및 유치산업 분야에 시장창출 및 원천기술 R&D 지원방식으로 투입되어 미래 대응 기능을 수행 ('11년 기준)

< 업종 정책별 주요 기능 분류 >



□ **(Group A)** 지경부 업종별 예산의 대부분이 투입되는 분야로, 시장 형성이 미흡한 신산업이거나 선진국 대비 경쟁력 열위인 유치산업 분야

⇒ 신산업 분야 시장창출을 위한 자원투입

* 바이오·의료기기 3,459억, 로봇 1,646억, 친환경 자동차 1,944억 등

⇒ 선진국 대비 경쟁여건 격차 완화

* 소재·부품 5,138억, SW 2,852억, 비메모리 반도체 937억 등

	신산업 창출			선진국 대비 경쟁여건 격차 완화			
	바이오의료기기	로봇	차세대 자동차	부품소재		소프트웨어	비메모리 반도체
				소재	부품		
2010	3,365	1,126	2,164	2,162	2,020	2,329	716
2011 (증감률)	3,459 (2.8%)	1,646 (46.2%)	1,944 (△10.2%)	2,910 (34.6%)	2,228 (10.3%)	2,852 (22.5%)	937 (30.9%)

□ **(Group B)** 시장이 성숙된 산업이나, 국제 거래에 수반되는 정보 비대칭성 해소 차원에서 정부 개입이 필요한 분야
(주로 무역/투자 분야 예산)

⇒ 기회주의적 행태 대응

* 거래리스크 분산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 1,000억

⇒ 거래비용 감축

* 해외마케팅 지원 및 무역인프라 구축 3,212억, 국별 주요 프로젝트 정보 제공과 무역장벽 해소 100억 등

	무역 촉진	투자 유치	산업자원협력
2010	4,569억원	3,809억원	101억원
2011 (증감률)	4,212억원 (△7.8%)	3,853억원 (1.1%)	98억원 (△3.0%)

□ **(Group C)** 구조조정 및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한 취약분야의 경쟁여건 격차 완화에 투입되는 부분은 다소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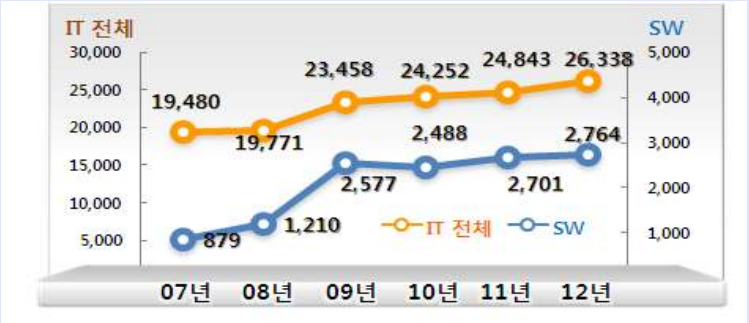
⇒ 취약업종의 경쟁여건 격차 완화 (뿌리산업 17억 등)

《 참고4 》 IT부문 예산지원 현황 및 평가

◇ 현 정부 출범 이후 IT 분야 정부 예산은 연평균 6.2% 증가하였으며, 이는 중소기업/산업/에너지 분야 예산 증가율(3.7%)을 상회

* 취약 산업인 SW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입도 3배 증가 ('07년 879억원→'12년 2,764억원)

< IT 분야 정부 예산 투입 추이 (단위: 억원) >



◇ SW, SoC, 네트워크 장비 등 전통적 취약 분야의 핵심경쟁력을 키우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07년 이후 수출과 국산화율 대폭 증가



◇ IT융합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는 추세(세계 IT성장률 5% vs IT융합 성장률 12%) 하에 IT융합 확산을 위한 예산 지속 투입

* IT융합 지원 예산 : ('10) 3,162억원 → ('11) 3,205억원

⇒ 국내 IT 융합생산은 연평균 13%대로 지속 증가세('07년 38.7조 → '11년 49.7조 →'15년 751조 예상)를 시현, IT+제조업 융합 기술개발도 활성화

* IT+조선 : 선박 실시간 통신기술 개발, IT+항공기 : 항공기 운용 SW, T-50 탑재

◇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현 정부 들어 IT 인프라 및 경쟁력 관련 각종 지수는 상승세 시현**

- ㅇ 전자정부지수(UN) : ('08) 6위 → ('12) 1위
- ㅇ 네트워크 준지비수(WEF) : ('07) 19위 → ('11) 10위
- ㅇ 정보통신발전지수(ITU) : ('09) 2위 → ('11) 1위

※ IT 경쟁력 약화 주장의 근거로 인용되는 **IT산업경쟁력지수(EIU)는 '08년 8위에서 '11년 19위로 하락**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객관성에 의문**

① 평가기준 변경 (IT관련 특허등록건수→전체 특허출원 중 IT 비중)
- IT 특허 출원건수가 우리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더라도 전체 출원건수 중 IT 특허 비중이 높은 나라가 우리보다 상위로 평가되는 왜곡 발생

② 과거 데이터 사용
- '11년 지수 산정시 과거 자료인 '07년 R&D 데이터를 사용

◇ **IT 분야 성과는 IT 관련 예산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일부 기인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산업진흥과 서비스규제기능의 분리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ㅇ **(산업진흥•서비스규제 통합모델)** 舊 정통부 하에서는 서비스 위주 정보화 전략에 집중하여 IT 소비강국의 기반은 마련하였으나,

⇒ 외산 위주 투자로 국내산업 기반이 위축되고, 이에 대응해 정부 주도로 국산화를 추진하였으나, 규제 부처가 특정 품목 및 기술을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민간 창의성 억제와 핵심 IT 산업 발전 지연*이라는 결과 초래

* (WIPI) 산업진흥 목적의 과도한 법적 강제로 스마트폰 발전 지연 초래
* (WiBro) 세계 추세인 LTE에 대비하던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강요하여 LTE 구축 지연
* (DMB)무료서비스 강제와 체계적 해외진출 전략 부재로 수익모델 창출 실패

ㅇ **(산업진흥•서비스규제 분리모델)** 현 지경부 하에서는 통신 서비스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전무하여 민간과 시장의 창의성이 활성화되고

⇒ 서비스 보다는 산업 진흥에 역점을 두어 SW, SoC, 네트워크 장비 등 취약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에너지 · 자원분야

◈ 에너지·자원분야 총 5조원 중 해외 유전개발 등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부문에 년 2조 5,000억원 수준 집중 투입

□ ①에너지·자원 공급, ②수요관리, ③신재생에너지 육성 등 세 부문으로 크게 나누었을 때, 주로 공급 부문에 재원을 집중 투입

ㅇ 에너지·자원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예산이 50% 내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최근에는 다소 감소 추세

ㅇ 반면,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 등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과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은 15% 내외 수준에서 20% 선까지 그 비중이 증가

< 에너지·자원분야 부문별 재원배분 현황 >

기능	세부 내용		2010년	2011년
독과점 관리 및 공공재 공급	안정 공급	•국내외 자원개발 •에너지 공급·비축 •원전 기술개발·운영 지원	2조7,859억원 (52.1%)	2조3,901억원 (47.1%)
	수요 관리	•효율향상(ESCO 등) •전력 수요관리 •기후변화협약 대응	7,524억원 (14.1%)	8,919억원 (17.6%)
미래 자원 투입	신재생 에너지 육성	•기술 개발 •인프라조성(실증 등) •보급 확대	9,373억원 (17.5%)	1조 613억원 (20.9%)
정보 비대칭성 해소	정책 인프라	•안전·품질 관리 •에너지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8,752억원 (16.4%)	7,270억원 (14.3%)
	합 계		**5조3,507억원**	**5조703억원**

□ 에너지원별로는 전통적인 에너지원인 석유('10년 38%→'11년 24%)와 새로운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21%→25%) 중심으로 지원

< 에너지원별 재원배분 현황(단위: 억원) >

	석 유	가 스	석 탄	전 기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기타 (조력 등)
2010	17,205	1,317	2,657	3,947	1,408	9,373	2,331	4,823	119	1,989
(비중)	38.1%	2.9%	5.9%	8.7%	3.1%	20.8%	5.2%	10.7%	0.3%	4.4%
2011	10,227	1,804	2,418	4,354	3,060	10,613	2,036	5,370	336	2,629
(비중)	23.9%	4.2%	5.6%	10.2%	7.1%	24.8%	4.8%	12.5%	0.8%	6.1%

○ 석유에 대해서는 해외유전 개발을 지원하는 예산과 국내 비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대규모로 지원

* '11년 기준 : 유전개발출자 7,100억원, 석유비축출자 1,250억원 등

○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단순 보급을 넘어, 신재생에너지산업 자체를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중

- 최근까지 발전차액지원('11년 3,950억원) 등 직접 자금지원을 통한 보급확대 정책 중심으로 운영

- '10.10월, 「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전략」* 수립을 계기로 기술·장비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통한 산업육성 정책 본격 추진중

* 주요내용 : ①10대 핵심원천기술(차세대 태양전지, 해상용 대형풍력 등) 및 8대 부품소재장비(태양광 장비, 베어링,기어박스 등) 개발, ②10대 그린프로젝트(항만, 학교, 물류단지 등에 보급) 등 '15년까지 국비 7조원 투자

<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현황(단위: 억원) >

	합계	기술개발	인프라조성	보급	기타 (인력양성 등)
2010년 (비중%)	9,373	2,994 (31.9%)	234 (2.5%)	6,033 (64.4%)	111 (1.2%)
2011년 (비중%)	10,613	3,071 (28.9%)	442 (4.2%)	6,858 (64.6%)	242 (2.3%)
증감률	13.2%	2.6%	88.5%	13.7%	116.9%

다. 수혜주체별

◈ 수혜주체는 기업(43.6%)과 함께 공공기관(21.0%), 연구소(15.6%) 등 국가 인프라 측면을 담당하는 주체들이 큰 비중 차지

◈ 기업 지원예산 중에는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68.3%로 대부분 차지

□ 전체적으로는 기업 지원비중이 43.6%로 가장 크고, 공공기관 21%, 연구소 15.6% 순이나, 분야별로는 상이한 특징 보유('11년 기준)

○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산업분야는 중소기업(32.5%) 등 기업이 43.2%, 연구소가 31.5% 내외로 큰 비중 차지

○ 국가인프라적 성격이 강한 에너지·자원분야는 에너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33.0%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석유공사 : ('10) 14,808 → ('11) 8,350억원 * 광물공사 : ('10) 1,392 → ('11) 2,100억원

< 지식경제부 예산의 지원대상별 재원배분 현황(단위: 억원) >

		기업					연구소	대학	협회 단체	지자체	공공 기관	개인
		대	중견	중소	기타	소계						
합계	2010	12,046	1,237	24,679	1,812	39,775	16,925	5,459	1,356	6,211	26,931	3,149
		11.5%	1.2%	23.6%	1.7%	38.0%	16.2%	5.2%	1.3%	5.9%	25.7%	3.0%
	2011	12,407	1,716	29,026	1,885	45,036	16,111	5,935	1,768	5,733	21,727	2,148
		12.0%	1.7%	28.1%	1.8%	43.6%	15.6%	5.7%	1.7%	5.5%	21.0%	2.1%
산업	2010	2,832	627	12,258	641	16,359	15,163	4,455	847	501	2,836	118
		6.6%	1.5%	28.7%	1.5%	38.3%	35.5%	10.4%	2.0%	1.2%	6.6%	0.3%
	2011	3,203	1,010	14,439	543	19,197	14,018	4,709	1,006	654	2,604	50
		7.2%	2.3%	32.5%	1.2%	43.2%	31.5%	10.6%	2.3%	1.5%	5.9%	0.1%
무역투자	2010	1,295	148	1,100	390	2,934	9	54	55	2,294	2,459	43
		15.3%	1.8%	13.0%	4.6%	34.6%	0.1%	0.6%	0.7%	27.1%	29.0%	0.5%
	2011	934	131	929	627	2,623	14	46	56	2,517	2,388	0
		11.4%	1.6%	11.4%	7.7%	32.1%	0.2%	0.6%	0.7%	30.8%	29.3%	0.0%
에너지자원	2010	7,918	461	11,321	780	20,481	1,753	948	452	3,415	21,635	2,987
		14.8%	0.9%	21.2%	1.5%	38.3%	3.3%	1.8%	0.8%	6.4%	40.4%	5.6%
	2011	8,270	574	13,657	714	23,215	2,078	1,179	705	2,561	16,734	2,098
		16.3%	1.1%	26.9%	1.4%	45.8%	4.1%	2.3%	1.4%	5.1%	33.0%	4.1%

□ 기업에 대한 지원예산 중에는 중소기업이 64.5%, 중견기업이 3.8% 등 중소·중견기업이 68.3%로 대부분을 차지('11년 기준)

○ 특히 산업분야의 기업 지원예산중에는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75%

< 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의 기업규모별 금액 및 비중(단위: 억원) >

		소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합 계	2010	39,775	12,046	30.3%	1,237	3.1%	24,679	62.0%	1,812	4.6%
	2011	45,036	12,407	27.6%	1,716	3.8%	29,026	64.5%	1,885	4.2%
산업	2010	16,359	2,832	17.3%	627	3.8%	12,258	74.9%	641	3.9%
	2011	19,197	3,203	16.7%	1,010	5.3%	14,439	75.2%	543	2.8%

○ 지경부의 中企 지원 예산은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혁신역량과 사업화역량이 다소 부족한 점을 감안, 기술개발, 사업화 등 기능을 기업수요와 여건에 맞추어 지원하는 것이 특징

< 지식경제부의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목적별 비중(2011년) >

	기술개발	연구기반 구축	출자융자 등 자금지원	SOC 등 인프라	인력양성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만 지원예산	19.2%	7.3%	18.3%	6.2%	2.0%	11.3%

3 평가 및 시사점

1 정부 전체의 재원배분 우선순위가 '복지' 중심으로 고착화

○ 우리 경제의 성장활력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소 아쉬운 현상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전망(OECD, '11.5년) : ('10~'15) 3.8% → ('16~'26) 2.4%

○ 사회안전망에 대한 정치권과 일반 대중의 요구는 점차 증가할 전망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 긴요

2 우리나라의 R&D 등 미래대비 투자는 증가하고는 있으나, 경쟁국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수준

○ 국가R&D 투자규모가 중국의 1/3, 일본의 1/6 수준 불과('09년 기준)

* 국가R&D 투자규모(억불) : ('05) 韓 235, 中 299, 日 1,513, 美 3,259
('09) 韓 297, 中 849, 日 1,690, 美 4,015

- 기초연구 대비 응용·개발연구의 비중도 다소 낮은 편

* 주요국 R&D 중 응용·개별연구 비중('08년) : 韓 81.8%, 中 95.3%, 日 84.3%

○ 불확실한 미래대비 투자의 리스크를 민간에만 부담시키기는 무리

⇒ 미래에 대한 과소투자 문제 해소 위해 미래대비 투자 적극확대 필요

3 중소기업에 대한 지나친 지원 확대는 中企의 현실안주 초래 가능

○ 지경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기업규모에 따른 경쟁격차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중

○ 다만, 지원규모·비중을 늘리는데에만 몰두하다 보면 시장에서 도태되어야 할 한계기업을 단순 연명시키는 역효과 초래 가능

⇒ 中企 지원책이 中企의 '생존'이 아닌 '성장'을 지향하도록 구성할 필요

4 산업·업종의 특성과 처한 여건에 따라 정부역할에는 차이

⇒ 민간과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선택과 집중' 전략 실현 필요

Ⅱ 2013년 예산투입 여건과 기본방향

1 대내외 여건

대외 환경

□ (세계경기 하방 리스크) 유럽발 경제위기 발생위험 고조

○ 유로존의 긴축과 실물경제 부진이 미국 경제로 전이되고 중국의 수출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세계경제 회복세는 기대 곤란

○ 그리스 정치불안,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등으로 유로존의 위기가 점차 현실화됨에 따라 세계경기가 급속히 위축될 가능성마저 제기

*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이후 IMF가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작업 진행중

□ (경쟁환경 변화) 세계경제의 중심축과 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화

○ 선진국 경제의 활력이 현저히 둔화된 가운데 신흥국 중심으로의 세계경제 재편이 지속

* '12~'13 경제성장률 전망(IMF,'12.4월) : (선진국) 1.4~2.0% (신흥국) 5.7~6.0%

○ 기술 고도화와 수요 다양화로 말미암아 異種 기술·산업이 융합된 다양한 제품·서비스가 탄생하는 등 지식·창의기반 경제가 본격 확산

* Apple社 i-Pod : MP3기기에 i-Tunes서비스를 접목하여 세계시장 장악
i-Phone : 디자인/기획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부 전문업체 활용

□ (지속가능 성장 위협) 에너지·자원 수급 불안 및 기후변화 문제 지속

○ 에너지·자원 수요 증가를 따라가기 어려운 공급(매장량)의 한계로 인해 에너지·자원 수급불안과 高유가 현상이 상시적으로 발생

○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환경의 변화는 전세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과제

*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7%(한국은 84.7%)가 에너지 생산·소비 중 발생

대내 여건

□ 수출의존형 경제구조로 인해 세계경기 동향에 민감

○ 최근 유로존 위기 여파로 조선, 자동차 등의 수출급감 우려 증폭

* 현대경제硏('12.6월) : "유럽위기 현실화되면 對EU 수출 207억$ 감소 전망"

○ 유로존 위기가 미국, 중국 등 다른 거대경제권으로 확산될 경우, 국내 경제는 성장활력이 현저히 둔화될 가능성

□ 기업규모·지역간 불균형 심화로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이 지연

○ 기업규모와 지역에 따른 양극화의 심화는 성장고리를 단절시켜 건전한 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저해

○ 단기 성과만을 위한 경쟁이 지나치게 격화되다 보니, 산업·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과 미래에 대한 준비가 소홀

□ 중장기 글로벌 경쟁환경 변화로 우리산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

○ 미래 경쟁력의 요체인 SW, SoC 등은 글로벌 수준에는 아직 부족

* 임베디드SW 국산화율('08년) : (자동차) 5%, (로봇) 5%, (조선) 4%

○ 창의력, 산업융합능력, 기업간 협업네트워크 등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소프트파워도 선진국·선진기업에 대비하여 다소 열위

□ 전력수요는 낮은 전기요금 등으로 인해 폭증한 반면, 공급능력 확충은 지연되면서 '13년 하반기까지 전력수급 위기 지속 전망

* 발전소 평균 건설기간 : LNG복합(5년), 석탄화력(7년), 원자력(10년)

◈ 대외여건의 변화에 대응한 단기 대응전략 추진이 시급

◈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SW, SoC, IT융합 등 핵심요소의 경쟁력 향상과 함께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

◈ 에너지·자원 안정적 수급, 기후변화 대비는 지속성장의 전제조건

2 2013년 예산투입 기본방향

세계경기 위축에 적기 대응
중장기「무역 2조달러 경제」기반 마련

1 대외여건 변화 적기 대응

- ○ 세계경기 위축에 대응, 중소기업의 무역지원 강화
- ○ 기업의 FTA 활용기반 확충
- ○ 중장기 시각에서 신흥국 대상 산업자원협력 강화

2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구축

-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 ○ 고용창출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 인력수급 원활화 촉진

3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 ○ IT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SW, SoC, Giga Korea 등)
- ○ 유망 성장산업의 경쟁력 향상
- ○ 취약분야 경쟁격차 해소 지원

4 안정적 에너지·자원 수급

- ○ 자발적·적극적인 에너지·자원 수요관리 유도
- ○ 에너지·자원 수급 안정화
- ○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육성

1 대외여건 변화에 적기 대응

○ 단기적으로, 세계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무역보험 지원 등 무역촉진 노력 강화

○ FTA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무역 및 투자유치 지원체계도 구축

○ 중장기적 시각에서 신흥국 등 전략국가 중심으로 산업자원협력 확대

2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구축

○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적 산업 생태계 조성

○ 고용창출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

○ 수요자 맞춤형 인력양성 확대,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인력수급 원활화 촉진

3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 SW와 SoC산업을 IT 핵심경쟁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Giga Korea 프로젝트, IT융합을 통해 IT산업의 지속성장 동력 확보

○ 로봇, 항공기 등 유망 성장산업은 기술력 등 경쟁력을 키우고, 해양플랜트, 뿌리산업 등 취약분야는 경쟁격차 해소를 지원

4 에너지 · 자원 위기 대비

○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전력 수요관리를 추진하고, 산업분야의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지원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석유부문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가짜석유 근절 추진

○ 신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 등 녹색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

5 우정서비스의 내실 있는 성장 지원

○ 우편서비스의 차질없는 제공을 위해 우편사업을 내실화

○ 우체국 예금·보험사업의 전문성·성장성 강화

Ⅲ 2013년 핵심과제별 예산투입 방향

1 대외여건 변화에 적기 대응

◈ 유럽발 위기 등 세계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무역투자 촉진노력 강화
◈ 중장기적인 신흥국 성장에 맞추어 전략국가 중심 산업자원협력 확대

1 (단기) 세계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무역·투자 촉진노력 강화

○ 경기위축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유망 중소기업에게는 보험한도 우대

*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규모는 기재부와 협의하여 조정

○ 유망 신흥시장 및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외전시회 참가, 공동물류센터 및 지사화사업 운영 등 해외마케팅 집중 지원

○ 중소기업의 FTA활용도 제고를 위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컨설팅·교육 등 지원

○ KINTEX 2관('11.9월 개장) 등 인프라를 활용한 전시회개최 지원

○ FTA 효과를 최대한 활용, 일본기업 등 외국인 투자를 집중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지원

2 (중장기) 신흥 개도국 등 전략국가 중심으로 산업자원협력 강화

○ 주요 선진국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하고 신흥국 등 전략국가에 대한 협력모델 개발 및 포괄적 산업자원협력 추진 지원

○ 개도국을 장기적인 협력파트너로 만들기 위해 ODA 예산 지원

2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

◈ 기업규모·지역간 경쟁 격차 완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지방-수도권간 동반성장 지원
◈ 우수인력 양성 및 제조업(산단) 기피현상 해소를 통해 선순환 촉진

가. 대-중소 기업, 수도권-지방의 동반성장 촉진

1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육성

○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유망 중견기업에게는 성장전략 컨설팅 등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전략, 기술 확보전략 등과 연계하여 핵심·응용기술 개발도 지원

○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촉진을 위해 성과공유제 확산, 동반성장 실태조사, 동반위 사무국 운영 등 지원

2 고용창출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추진

* 지역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현재의 3단계(광역선도-지역전략-특화)에서 '13년부터는 2단계(광역선도전략-지역특화)로 통합 운영하여 효율화 추진

○ 광역경제권선도전략 사업은 광역경제권별로 新성장동력산업 2개, 지역주력산업 2개를 선정·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

○ 지역특화 사업은 시·도 자율적으로 선정한 지역주력·뿌리산업 등 지역기반 고용창출형 산업클러스터에 대해 기술개발 등 통합 지원

나. 인력수급 원활화 촉진

1 산업인력 육성·관리 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

○ (인력양성) 산업·기술·시장 등 인력수요 변수의 변화가 인력양성 체계에 적극 반영될 수 있게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 구축 지원

- 고교～대학 : 교육과정의 산업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커리큘럼 개편, 현장실습,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등 지원

- 대학원 이상 : 신산업(로봇·바이오), IT, 에너지 등 분야 대학원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R&D과제, 장비 구축 등 지원

○ (인력관리 인프라) 산업별 인력수급 실태조사, 업종별 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교육훈련 커리큘럼 개발 등 인력지원 기반 조성

2 노후 산업단지를 매력적인 일자리(QWL 밸리)로 전환

○ (산학융합지구) 기 선정된 3개와 '12년 선정 예정인 3개 지구에 QWL캠퍼스, 기업연구관 등을 구축하고 산학융합촉진 사업 추진

○ (QWL펀드) 기업집적화센터(기업중심 추진), 공용·복지시설 등이 결합된 'QWL Complex' 건립 지원 추진

3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 SW, SoC 등 IT산업의 핵심경쟁력을 키우고, Giga Korea 프로젝트, IT융합 등 IT산업의 지속성장 동력 확보

◈ 로봇, 항공기 등 유망 성장산업은 기술력 등 경쟁력을 키우고, 해양플랜트, 뿌리산업 등 취약분야는 경쟁격차 해소를 지원

가. IT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1 SW와 SoC산업을 IT 핵심경쟁력으로 집중 육성

○ 소프트웨어산업 기초체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지원

- SW, 지식정보보안 등 분야의 신기술 및 플랫폼 기술개발 지원

-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SW마에스트로, SW채용연수 등을 통해 대학(이론)과 기업(실무)를 연계한 창의적인 고급 SW인재 양성

○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국내 수요기업이 있어 시장규모가 큰 휴대폰, 디지털TV,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부터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2 Giga Korea 프로젝트, IT융합을 통해 IT산업 지속성장 동력 확보

○ (Giga Korea) '20년까지 기가급 통신환경 구축을 위해 네트워크·플랫폼 장비·부품을 개발하여 모바일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

○ (IT융합) IT융합이 산업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산업별 맞춤형 확산 전략과 신융합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나. 유망 성장산업과 취약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

1 유망 신산업과 성장산업은 기술력 등 핵심역량 확충

○ (소재·부품) 소재·부품 정책을 '부품'에서 '소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R&BD, M&A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지원

○ (항공기) 민수 완제기 시장 진출을 통한 국내 항공산업의 도약을 위해 90인승 터보프롭 중형 항공기 국제공동개발 지원

○ (나노융합, 지능형 로봇) 초기단계인 유망 신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기술개발과 보급확산 지원

2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경쟁격차 해소 주력

○ (뿌리산업) 지역거점별 파일럿플랜트 구축, 시제품제작 서비스, 작업환경·공정 개선, 인력공급시스템 확충 등 지원

○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심해저 등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해양플랜트 연구활동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구축 등 추진

○ (디자인+중소·중견기업) 디자인 결합시 효과가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제품개발 전략과 디자인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 추진

4 안정적인 에너지 · 자원 수급역량 확충

◈ 전력수급 위기에 대비, 강력한 에너지 수요관리 추진
◈ 에너지 공급 안정화를 위해 해외 자원개발과 함께 국내 유통구조 개선 지원
◈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개발·보급 지원

가. 강력한 에너지 수요관리 추진

1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전력 수요관리 추진

○ '13년까지 심각한 전력수급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간예고 수요조정 등 수요감축 지원

○ 부하관리기기 보급, 에너지절약 홍보 등 수요조정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도 병행 추진

2 산업분야의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촉진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제도운영과 기업의 이행 지원

○ 관리업체에서 제외된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부구매 등 인센티브 부여

○ 공공건물 ESCO투자 의무화, IT 활용 ESCO 사업모델 보급 등을 통해 ESCO사업 수요창출 지원

나. 에너지 · 자원의 안정적 공급 역량 확충

① 자주개발 역량 강화로 안정적 에너지·자원 공급체계 구축

○ 에너지·자원개발 전문공기업에 대한 출자를 통해 생산광구 매입, 6대 전략광물 확보 등에 필요한 투자자금 지원

＊ 6대 전략광물 : 철광석, 구리, 유연탄, 아연, 니켈, 우라늄

○ 석유 수급위기를 대비, 국가 비축시설 146백만B 건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비축유 141백만B 확보('13년까지) 지원

○ 녹색산업의 필수원료인 희유금속(몰리브덴, 희토류 등 9종) 등의 비축 확대(국내수요량 60일분, 희토류 100일분) 지원

＊ 비축광종(9종) : 크롬, 몰리브덴, 안티모니, 티타늄, 텅스텐, 니오븀, 셀레늄, 갈륨, 희토류 등

② 석유부문 유통구조 개선과 가짜석유 근절 추진

○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주요지역 알뜰주유소 운영 등을 통해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

○ 석유제품 유통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짜석유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

다.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의 성장 촉진

①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 신재생에너지 10대 그린프로젝트 추진 등 보급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 지속 지원

○ 스마트그리드 초기시장 창출 및 제주실증단지 활용방안 마련

○ 효율제도 표준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도 운영 등을 통한 저탄소 기반 확대

②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원전 운영기반 조성

○ 국민의 막연한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원전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원전 안전성 홍보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속 실시

○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처분을 위하여 건설 중인 경주 중·저준위 처분시설의 적기 준공과 사용후핵연료 관리기반 조성 지원

5 우정서비스의 내실 있는 성장 지원

◈ 對국민 보편적 행정서비스로서의 우정서비스의 차질없는 제공을 위해 우편사업, 우체국 예금사업, 우체국 보험사업 내실화

1 우편 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 및 우편사업 내실화

○ 운송료, 인건비 등 우편서비스 관련 경비의 필수소요 반영

○ 노동집약적 사업의 한계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물류시설의 기능조정을 통한 물류고도화 및 우편사업의 자동화·정보화 지원

2 우체국 예금사업의 수익성 제고 및 금융인프라 고도화

○ 법인자금 유치 등 예금 수신구조 개선을 위한 전략적 마케팅을 강화하고, 수신고 증가에 따른 지급이자 지출소요 반영

○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체크카드 및 자동화기기 보급 지원 확대

3 우체국 보험사업의 전문성 강화 및 안정적 성장 도모

○ 보험 청약·지급심사 강화를 위한 심사인력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콜센터 상담인력 증원 등 필수소요 반영

○ 보험사업 건전성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손해율관리시스템 보험금 지급심사 지원시스템 등 보험 정보화시스템 구축